

특집

한국전쟁의 미시적 분석

#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 ‘도강’ · ‘피난’

김 동 춘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 본지 편집위원

## 1. 머리말

우리는 북한이 개시한 6·25전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쳐왔으며 이 북한군의 침략을 맞이하여 서울의 정부와 ‘충성스러운’ 국민은 ‘모두’ 피난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남부여대(男負女戴)한 선남선녀의 피난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한국 현대사교과서 그 자체이다. 설사 서울이 갑자기 점령되어 불가피하게 피난을 못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피난을 갔어야 했고, 전쟁 후 충분히 피난 갈 여유가 있었는데도 피난을 가지 않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이거나 ‘빨갱이’로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실제 9·28 서울수복 직후 피난 여부는 ‘반공’의 표식이 되어 피난가지 않은 자는 ‘반역’에 기웃거린 자로 지목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으며, 서자(庶子) 혹은 ‘이등국민’ 취급을 당하면서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 처벌의 위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난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신이 피난을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다’는 사실을 종종 강조하고 있다.

사실 피난은 생과 사의 선택으로서 국가가 바뀌면 자신이 목숨을 부지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특히 피난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피난도상에서의 위험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족단위의 피난은 거의 감행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행동에는 자신의 계급적 처지, 이승만정권과의 정치적 거리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6·25 발발 직후의 초기 피난과 1·4 후퇴 당시의 2차 피난은 성격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전쟁시의 모든 피난을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이 시작한 전쟁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인민의 지배’를 남한 전역에 확대하려는 시도였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승만과 정부각료 등 국가의 핵심 구성원을 제외한 남한주민 중 “누가, 어떻게 피난을 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전쟁이 가진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탐구해볼 수 있다. 그것은 피난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전쟁 이후 현대 한국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 2. 본론 : 위기 속의 선택

### 1) 1차 피난 : 정치적 피난

9·28수복 후 서울에 다시 들어온 한국정부는 전쟁 발발 후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열광적 환영형, 기회주의적 정관형, 미처 피난가지 못한 지하잠복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인민군이 서울에 진격했을 때 이승만과 군상총부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대다수 민중들은 관망하고 있었다. 전자에게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 전투지휘를 위한 국가수뇌의 후방후퇴라는 명백하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존재했으며, 남북한 정권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던 후자, 특히 가족 중 군인이나 경찰이 없었던 보통의 한국민 중은 전쟁이 발생했더라도 그냥 살고 있는 곳에서 생업을 도모하는 길을 택하였다. 결국 인민군이 남하했을 때 피난할 것인가 잔류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북한의 계급정책, 즉 지주, 예속자본가, 친

일·친미파, 민족반역자, 반동분자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인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기에 있었거나, 어떤 형태로든 해방정국 혹은 일제하에서 정치·사회활동에 참여했거나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가진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즉 '인민정권'이 자신을 '적'으로 분류할 것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피난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잔류를 결심했을 것이다. 남한 지배층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1945년 이후 북한의 '민주개혁'을 피해 월남한 인사들, 김일성 정권의 가장 중요한 처벌대상이 되는 친일경력을 가진 사람들, 군인과 경찰 가족들, 대한민국정부하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지배층이나 우파지식인들은 가장 일차적으로 피난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다.

물론 인민군이 워낙 급작스럽게 내려왔고 정부가 전황을 왜곡 보도했기 때문에 피난을 갔어야 할 다수의 서울사람들도 그냥 잔류하게 되었다. 기록을 보면 6·25 때 144만 6,000여 명의 서울시민 중에서 40만 명이 수도가 인민군에게 점령되기 전에 남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 가운데 8할이 월남동포였고, 나머지 2할인 8만 명이 정부고관, 우익정객, 자유주의자, 군인·경찰의 가족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6·25 직전 서울에 거주했던 '월남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도하에 확대과장되어온 경향이 있고,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6·25 직후 월남자의 분포상황을 보면 88만 9,000여 명의 월남민이 1951년 1월 당시 남한에 거주했다고 한다. 6·25 직후 인민군을 따라 정치적 동기로 월남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므로 이 수치는 1945년에서 1950년 6·25 이전까지의 월남자 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6·25 이전의 월남인들은 당시의 계급구성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배계급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월남동기는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946년 당시의 월남자는 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월남했다고 추정되고 그 이후의 월남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월남했다. 월남자 중 반수 이상이 서울에 거주했다고 간주하고, 앞에서 지적한 40만 피난자 중 8할이 월남자라는 지적을 신뢰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던 월남자들은 거의가 곧바로 피난의 길을 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북 출신자의 월남과 피난은 "이미 북한



▲ 배급되는 쌀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서울시민들(1951. 3. 19)

정권하에서 공산당의 만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북한에서의 탄압을 피해서 월남한 것은 분명하므로, 만약 인민군이 내려온다면 가장 분명하고 일차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피난은 생과 사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전쟁발발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서로 연락하여 집을 꾸려서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 발발 후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인민군 남하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피난을 간 사람은 경찰, 대한청년단 간부, 면서기, 지주 출신과 그 가족들이었다. 친일경력을 가진 인사, 미군정하에서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 그리고 해방정국 당시 우익활동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청년·학생들도 서둘러 피난을 갔다. 한편, 6월 27일 일부 남한정부에 ‘필요한’ 수감인들도 서울형무소 문을 열고 구출된 후 남하했다. 누가 구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구 살해범 안두희도 이 무렵 곧바로 구출되어 남하했다. 이들은 모두 인민군이 점령할 경우 1945년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바 있는 ‘민주개

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

물론 북한당국에 의해 적으로 분류되어 처벌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지배층, 지식인층이 모두 자신의 정치적, 계급적 처지만을 고려해서 곧바로 피난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인이나 중간층의 경우는 피난과 잔류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들도 결국 피난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월남자나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층, 우익활동가들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 피난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기초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의 경우 피난과 잔류의 접점에서 수차례의 번의(蒜意)를 거친 끝에 결국 피난길에 나섰다. 처음 그는 주변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주변사람들이 “선생은 가셔야죠 무슨 의미로든지”라고 답변하자, 결국 피난을 선택한 것이다. 추격하는 적에게 붙들리는 것보다 집에 앉아있다가 잡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가, 또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는 도망을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온몸을 휩쓸어 명인과 일체의 신분증명서를 소각하고 28일이 되어서야 피난길을 나섰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를 저주하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출발점에 이의가 없지만, 공산주의의 철의 통제를 싫어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혐오한다. 빵 있는 노예보다 빵 없는 자유를 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의 총성이 다가오는 가운데 피난을 선택한 한 중간층 지식인의 고뇌에 찬 피난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서 우리는 6·25 직후의 ‘1차 피난’은 분명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유복한 환경에 있었던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간 것은 당연하였으며, 월남자들이 가장 먼저 피난을 서두른 것 역시 이들이 겪은 정치적 경험의 부정적 기억과 더불어, 자신들을 북한당국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결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 중에서는 공포감 때문에 피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 2) 잔류 : 중도파 정치가, 지식인, 자영업자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당시 남한에 살고 있던 지배집단이나 지식인들 중에서 전쟁발발을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사건이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쟁이 났을 때, 공산주의에 반드시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정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엘리트층은 자의 반 혹은 타의 반으로 대체로 서울에 남아있었다. 이들은 이후 남한당국에 의해 '기회주의적 정관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잣대로만 평가한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더라도 자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즉 잔류자 중에는 이승만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공직자'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정부가 이후 분류한 바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인민군의 낙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 '좌익'들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피난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고쳐 끝에 서울에 잔류한 사람들을 보면 중도우익 혹은 반이승만 노선을 취한 정치가들이었다. 국회프락치사건 관련자들, 상해임시정부 계통의 중간파 정치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기로에 놓였다. 한독당계 정치인들은 "국민을 내버리고 남하하여 개인의 구명만 하겠다는 비겁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결의하고 서울에 남아있다. 그러나 안재홍처럼 이승만의 정적이라는 위치 때문에 피난을 가도 남아있어도 생명의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느낀 경우도 있었다. 이후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승만이 전쟁을 기회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모조리 공산당으로 몰아서 총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잔류를 선택했다가 이후 북한으로 연행되어갔다.

한편, 우익반공주의 노선에 확고히 서있었으나 정치가로서의 도덕적 책

임의식 때문에 서울에 잔류한 경우도 있었다. 조헌영의 경우처럼 정치노선은 이들과 달랐지만 “내가 어떻게 서울을 버리고 가느냐. 오늘 오전 중에 국회를 열어 서울을 사수한다고 결의를 해놓고 어떻게 떠나느냐. 국회의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서울을 지키라고 해놓고 내가 어찌 가겠느냐”하며 서울을 사수할 뜻을 밝힌 경우가 그 예이다. 27일 당시 남하한 148명을 제외하고 행방불명되었거나 납치된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이러한 범주에 속했다.

군 장성 중에서는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 장군이 잔류했다. 한편, 해방 후 그를 등용한 유동열도 서울에 잔류했다가 납북되었다.

한독당계 혹은 중간파 계통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이들이 서울에 잔류한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이들이 인민군 치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일본군 출신들이 점차 군부에서 실세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이 배제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정권과의 거리감이 더 중요한 변수였던 셈이다.

물론 서울에 잔류한 정치가들 중 적극적 잔류와 고뇌과정의 잔류, 그리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해서 잔류한 경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이승만정권이 분류하였듯이 인민군이 점령한 후 자진해서 출두하고 다른 사람의 소재파악에 적극 협력한 형, 동료들의 권유와 압력을 받고 출두한 형, 강제연행된 형으로 구분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진출두했다고 해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전쟁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연행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기초한 구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피난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잔류한 정치가나 군인 등 당시의 엘리트층은 주로 이승만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남북분단 과정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사상적으로는 우익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이미 친일세력, 극우반공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정치적 반대자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다.

한편, 대다수의 중도적 지식인들은 미처 피난할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울에 잔류했다. 국내외 정세를 읽고 있었던 김성철은 북한의 침략 소식을 듣고 “38선에서 항상 되풀이하는 총돌의 한 토막인지” 반신반의하다가 다음날에 가서야 “5년 동안 민족의 뉘를 가위누르던 동족상잔이 마침내 오고 마는구나”라고 하면서 피난을 해도 어차피 갈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대한민국의 국채며 몇 가지 서류를 불태우고”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김재준의 경우 북한의 탄압을 받을 수 있는 목사의 신분임에도 피난을 가지 않은 그의 행동에는 미국측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판단과 더불어 전쟁발발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현실이해가 깔려있었다. 당시 젊은 대학교수였던 김태길 역시 전쟁발발을 전부터 계속되었던 무력충돌의 하나로 인식하고는, “어느 편이 아군이고 어느 편이 적군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까닭에 유엔군과 국군이 밀고 올라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온 다음에도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변화된 체제에서 적응하는 문제로 고심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한국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피난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승만정권이나 김일성정권이나 그게 그것 아니겠는가 하는 중간적 입장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 역시 대체로 잔류했다. 소설가 팔봉 김기진은 “나는 해방 이후 글 한 줄 안 쓴 인쇄장이요, 정부고관도 지낸 일이 없으니까 큰 변은 당하지 않으리라”고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서 서울에 잔류했다. 윤인상은 처음에는 피난가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올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정치운동이나 청년단체에 가담한 일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제조업에만 종사해왔으니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해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는 “내가 문화사업을 했고 육영사업을 했는데 공산당이라고 나를 해칠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남아있었는데, 사실 그는 좌파 지식인에게도 은밀하게 장학금을 대어주던 사업가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자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였던 정구영은 “피난을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마침 정부에서 서울을 사



수한다고 하고 국회도 야간회의를 소집하고 토의한다고 하고…… 그래서 애써 정부를 믿기로 하고서” 잔류를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듯이, 핵심 권력엘리트, 우익세력, 월남자들처럼 인민군의 남하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믿지 않았다 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말단 공무원 혹은 동네의 구장 정도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 역시 피난과 잔류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 때 이장을 지낸 사람은 친일파로 분류될 것이 두려워 피난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도 “여자는 안 죽인다”는 소문을 믿고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남겨두었다. 그러나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은 ‘농사철’에 농사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적극적인 ‘피난’ 행동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민정권이 들어서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지식인 등 중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층은 미국-이승만 체제나 소련-김일성 체제 어느 쪽에도 강한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인민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특별히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6·25 발발 직후의 피난과 잔류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계급적 동기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잔류’의 경우 정치적 계급적 동기와 더불어 도덕적 동기도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잔류한 정치가의 경우 민족주의적인 인사, 유교적 정치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식인 출신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이승만정권하에서 핵심권력층으로 변한 과거 일제치하의 관료, 지주 출신의 정치가, 미군정하에서 재빨리 권력권으로 진입해 들어간 엘리트 등과 달리 사적인 이해보다 공인(公人)으로서의 책무를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들의 정치적 행보와 전쟁발발 직후의 피난행동이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민족행위자 처벌과정,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농지개혁법 처리과정 등 개혁-반개혁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민중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조헌영 같은 우파 정치가들이나 같

은 우파이나 민족주의적 입장에 섰던 한독당계 인사들이 주로 잔류를 택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잔류는 이승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국민과 민중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결합되어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1945년 이후 농민운동이나 좌익활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1949년 이후 지하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쟁은 해방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피난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들은 “이제야 통일이 되는구나”, “더없는 기쁨으로 마음속에 환호를 외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인민군을 반겼다. 이들은 “환희에 넘친, 거의 광적일 정도로 흥분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인민군 치하는 이제 그들의 세상이었다. 인민군 진입 직후 서울은 바로 ‘지옥’의 문턱에 선 사람과 ‘천국’의 문턱에 선 사람이 공존하는 기이한 정치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두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간의 공존이야말로, 이후 다가올 보복과 학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서는 반드시 좌익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정권에 염증을 느끼던 젊은이들이 전쟁발발을 환영하기도 했다. 박찬웅의 경우 수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 이승만 독재자가 서울로부터 쫓겨나는 것일까. 온 국민이 이제까지 이승만 독재에 대해 꿈쩍달짝 못하고 시달렸던 것은 무기력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토록 무식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것을 기화로 오만불손한 독재를 자행해온 이승만은 정히 국민의 적이다. 이놈이 한번 혼이 나면 얼마나 통쾌할까? 이승만의 나라는 또 고문의 나라다. 그의 고문을 대서특필하여 길이 후세에 남겨야 할 일이다.…… 나는 인민군의 진주에 대해 감사할 것도 없고, 폭력적 정변에 대해 감격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간 갖은 고문을 당하고 갖은 모욕을 받고 사상범으로서가 아니라 살인방화의 범으로 투옥되어있던 다수의 관제 빨갱이들 —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근래에는 자유주의자는 물론 이승만과 똑같은 주의의 김구 계통의 사상적 실천주의자들까지 반정부는 반국가라는 구실하에 투옥되고 있다 — 의 출옥에 대해 나는 사상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보낸다

결국 우리는 이후 대한민국과 이승만이 유포한 바 인민군의 서울점령 당시 '잔류' 한 사람=좌익, 좌익 동조, 기회주의라는 단순도식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심적 관료나 정치가, 지식인이었다면 힘없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가재도구를 챙겨 혼자만 살자고 피난의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 3) 2차 피난 : 생존을 위한 피난

한편, 전쟁이 계속되면서 6·25 직후의 서울이나 경기 이남 지역에서의 '1차 피난' 과 달리 이제 이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피난을 가는 일이 발생했다. 미군의 폭격과 공습을 피해, 그리고 국군과 미군의 강제 소개명령에 의해 피난한 경우도 있고, 서울과 남한 전역이 수복되고 38선 이북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했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인민군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피난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미공군이 투입되고 국군이 진격한 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피난을 '2차 피난' 이라 부를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 전 시기를 걸쳐 인민군의 남하를 피해 피난한 정치적 피난보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서 피난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은 전쟁시기 한국인들을 가장 공포에 질리게 한 일이었다. 미군은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가했기에 길거리를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폭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남한지역에서도 상당수 주민들이 미군과 국군의 위협에 의해 피난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영동의 노근리, 왜관교 폭파 등은 이들의 유도에 의해 온 동네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다가 학살 혹은 폭격으로 몰살당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1·4후퇴 당시 한국측과 미군측은 조직적으로 월남인 소개 및 피난민 정책을 세웠다. 기술자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월남을 시키기도 했다. 김귀옥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월남한 때가 바로 중공군 개입 후 국군후퇴 당시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남하하는지도 몰랐고, 잠시 소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중공군에 대한 나쁜 소문, 원자탄 투하의 공포 때문에 피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피난은 모두 정치적 계급적 피난이 아니라 순수하게 전쟁의 공포 때문에 피난한 경우에 속한다.

한편, '2차 피난' 시에는 국군이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후퇴하는 상황에서 국군측에 협력했던 것 때문에 다시 인민군이 진입할 경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피난한 경우가 있었다. 즉 주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북한 정권이 교대로 바뀌고 그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적대적인 정권에 의해 부역자, 협력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1차 피난시 잔류했던 서울의 중간층 다수도 2차 피난시에는 곧바로 피난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인민군이 남하했다가 후퇴하면서 인민군을 따라 북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1차 피난 당시 거주지에 잔류했다가 자의 반 타의 반 인민군에게 협력한 사실이 국군에게 드러날 것이 겁이나 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진목이 목격한 것처럼, 이들은 6·25 직후에는 서울에서 남으로 피난을 가고 인민군이 후퇴하자 남에서 북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경우의 피난은 전선이 이동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요구된 것이었다.

한편, 국군과 미군이 북한지역을 40일 정도 점령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할 때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경우 피난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당부분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나, 한국측의 의도적인 월남정책·소개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미군과 한국군 점령시 이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피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이 이들 모두를 데리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흥남부두에서 피난하려던 주민들은 “우리를 버리고 혼자만 가십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모두 죽습니다. 모두 학살당합니다. 마치 메시아를 향해 부르짖듯 군중은 손을 서로 높이 들어 구원을 바랐다.” 배에 매달려 있다가 바다에 빠져죽고, 서로 배를 타려고 밀고 싸우던 당시의 아비규환 상황을 보고 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은 바 있다

미국놈들아 미국놈들아 너희들이 차라리 여기 오지 않았던들 우리는 죽

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고 가는구나. 너희 미국놈들을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구나. 너희들을 믿고 타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미국놈들에게 속았다. 저 주받을 미국놈들아.

국가와 국민, 영토 혹은 조직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국가간의 괴리가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는가? 즉 전선이 바뀔 때 따라 영토가 바뀌고 바뀐 영토를 따라 국가조직이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국민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국민은 적 치하와 국가 치하에 쉽게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국가에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국가, 즉 군대는 거주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 이 경우 국가 즉 군대가 이동하자, 그 국가에 충성을 바친 국민은 그 국가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정부, 이북5도청에서는 1·4후퇴 당시의 월남자들의 상당수는 "점령기간의 정책들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난'이 반공주의의 표식으로 칭찬받는 한국에서 이들의 피난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미군이 북한을 '수복'하자, 이제 한국 전역을 통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려는 행동을 했다가, 중공군의 투입으로 미국이 패퇴하게 되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월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3. 마무리

우리는 전쟁 후의 피난행동이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설명되어온 통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인민군 남하과정에서 피난한 사람들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1차 피난의 성격과 2차 피난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 '2차 피난'의 경우 피난민은 '1차 피난'과 달리 지배층, 군

인과 경찰 등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2차 피난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초래한 생존의 절대절명의 요구, 그리고 인민군이 점령한 다음 불가피하게 협조하게 되어 결국 이승만정권으로부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난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피난은 정치적 피난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피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쟁시 모든 국민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은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다.

한편, 기회주의적인 중간층 혹은 회색분자들이 서울에 남아있었다고 보는 것도 오류이다. 앞의 조헌영의 경우나 한독당계 정치가들처럼 국민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부수립 후 각종 개혁과정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우익인사들도 상당수 남아있었다. 조헌영의 경우 1948년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선량한 국민과 애국지사까지 탄압할 우려가 많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한편, 그는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친일세력이 압살하려 한다는 계획을 입수하여 국회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제헌국회 회기 동안 368회의 발언을 행함으로써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진기록을 남기기도 한 인물이다.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봉암 같은 사람은 정부의 기밀문서를 챙기는 등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6·25 직후 피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쟁과 더불어 만성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구조화되어 한국사회를 '피난사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피난행동은 개인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 사회구성원의 구조화된 행동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두가 피난지에서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며, 권력자와 민중들 모두가 어떤 질서와 규칙 속에 살아가기보다 당장의 목숨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다투고, 차를 앞질러가기 위해 다투는 한국인들의 오늘 행동은 서울행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아우성치던 50년 전 한국인들의 모습이나 홍남부두에서 떠나는 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피난민의 행동과 얼마만큼 다른가? 이들의 행동이 과연 반공주의에 기초한 애국적 행동인가?